

참고 8.

대·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전략」 공표, 「탄소중립 기본법」¹⁾ 제정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transition)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²⁾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대체로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이들 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수직계열화 구조³⁾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영향이 생산 구조상 하위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 대기업들은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⁵⁾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친환경 생산구조로의 전환

에 대한 비용부담이 커 대다수가 탄소중립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금융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 강화, 투자자들의 환경 이슈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녹색금융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 녹색금융은 자금조달 및 금융투자에 있어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한다. 녹색금융 시장의 활성화는 저탄소기술 개발 기업 등 기후변화 대응이 우수한 부문으로 금융자금이 집중되는 자금흐름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은 녹색금융의 활용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녹색금융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별로 녹색금융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현황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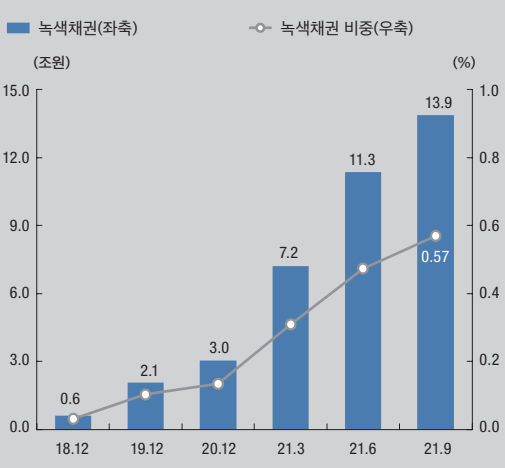
녹색금융 시장 현황

녹색금융 시장은 녹색채권 시장, 녹색펀드 시장, 녹색대출 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녹색채권, 녹색펀드, 녹색대출 시장 모두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증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 1) 「탄소중립 기본법」의 공식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다. 동 법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립,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2) 대표적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있다.
- 3) 정재한·홍장표(중소기업연구,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타 기계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은 업종 내 선도대 기업을 정점으로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로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계층화된 분업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 산업에서 최종생산물을 시장에 제공하는 대기업들은 1차 협력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고,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2차 협력기업은 다시 3차 협력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고 있다.
- 4)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내 중소기업 중 42.1%는 대기업 등 타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수급기업이며, 이들 기업의 매출 중 83.3%가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로 나타났다.
- 5)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 조사'(21년 4월)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기업 중 64.8%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 중이거나 대응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대응계획 방안으로는 '사업장 내 온실가스 감축투자'가 7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21년 2월)'에 따르면, 56.1%의 중소기업은 현재 '탄소중립 대응 관련 준비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며,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저탄소 공정개선·설비도입 관련 비용부담'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서 환경부가 규정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⁷⁾」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이다. 녹색채권 발행잔액은 2021년 9월말 기준 13.9조원으로, 2020년말(3.0조원) 대비 358% 증가하였다. 아직은 녹색채권 발행잔액이 2021년 9월말 기준 전체 채권 발행잔액(2,433.4조원) 대비 0.57% 수준에 불과하나 최근 민간기업⁸⁾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녹색채권 시장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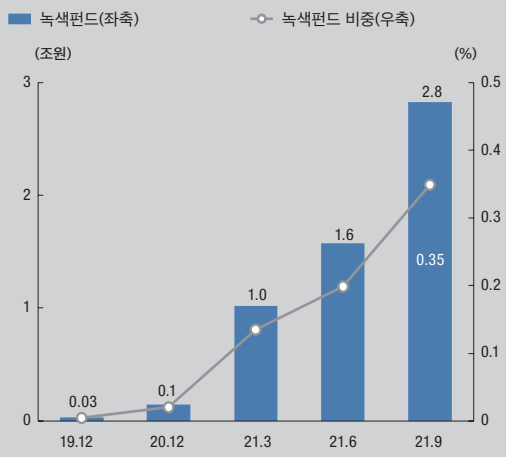


주: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녹색채권 발행잔액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녹색펀드는 펀드 구성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요소 외에 친환경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펀드이다. 녹색펀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대, 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을 증진시키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 국내 녹색펀드 순자산 규모는 2021년 9월말 기준 2.83

조원으로 2020년말(0.14조원) 대비 1,872%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체 공모펀드(810.1조원) 대비 비중은 0.35%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녹색펀드¹⁾ 시장규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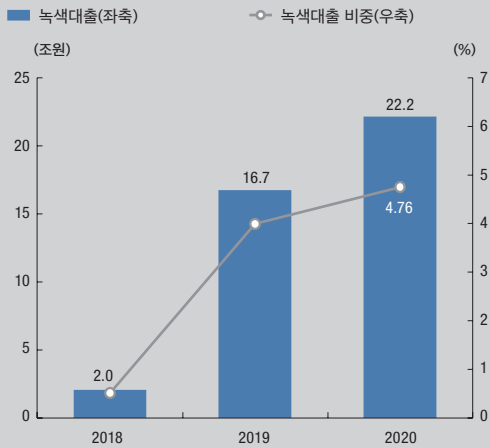


주: 1) 국내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중 주식 포트폴리오내 50% 이상을 친환경 부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펀드(모닝스타의 분류기준)
2) 펀드의 순자산 규모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녹색대출은 친환경 노력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및 한도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출이다. 은행들은 자체 혹은 외부기관의 환경성과 평가⁹⁾를 바탕으로 녹색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 기준 국내 녹색대출 잔액¹⁰⁾은 2020년말 22.2조원으로 2019년말(16.7조원)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2020년말 해당은행 기업대출(466.2조원)의 4.76% 수준이다.

7) 환경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채권 발행자는 (1) 조달자금의 사용 (2)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3) 조달자금의 관리 (4) 사후보고 등 4가지 측면에서 회계법인, 신용평가 회사, 컨설팅 회사 등 외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8) 2021년 9월말 기준 민간부문의 녹색채권 발행잔액은 10.9조원으로 2020년말(2.4조원) 대비 350% 증가하였다.
9) 외부기관 평가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 평가등급이 주로 활용된다.
10)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녹색대출 규모 기준이다.

녹색대출 시장규모¹⁾



주: 1)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녹색대출 잔액 기준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대·중소기업별 녹색금융 접근성 평가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녹색 프로젝트 기획, 환경정보 공시 등 환경요소를 별도 관리할 역량을 축적하고 있어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모습이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환경요소를 별도로 관리할 역량이 취약한 실정이라서 녹색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 프로젝트 투자 및 친환경 생산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녹색채권 발행 및 관련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잔액은 2021년 9월말 기준 10.9조원인 반면, 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은 전무한 모습이다.¹¹⁾

대·중소기업 간 녹색채권 발행현황 비교¹⁾

(개, 조원)

	대기업 ²⁾	중소기업 ²⁾	공공기관
발행기관 수 ³⁾	50 (84.7%)	0	9 (15.3%)
발행잔액 ³⁾	10.9 (79.0%)	0	2.9 (21.0%)

주: 1) 2021년 9월말 기준

2) NICE 평가정보(KIS-Value)의 중소기업기본법 기반 기업규모 분류 기준

3) () 내는 전체 발행기관 수 및 발행잔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아울러 대기업은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요소를 적극 관리하고 이를 대외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녹색투자 대상에 다수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을 통해 환경정보를 자체 공시하고 대외평가기관의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정보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환경정보 공시·평가실적이 있는 대기업은 765개 기업인 반면 중소기업은 137개 기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업은 평균적으로 'B'등급의 환경성과 평가를 받았으며, 중소기업은 'C'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환경정보 공시·평가 현황 비교¹⁾

(개, 등급)

	대기업 ²⁾	중소기업 ²⁾	공공기관
피평가기관 수 ³⁾	765 (84.2%)	137 (15.1%)	6 (0.7%)
평가결과 ⁴⁾	B	C	B+

주: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20년말 환경정보 평가 기준

2) NICE 평가정보(KIS-Value)의 중소기업기본법 기반 기업규모 분류 기준

3) () 내는 전체 피평가기관 수 대비 비중

4) 환경평가 등급(S, A+, A, B+, B, C, D)의 집단별 평균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1)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중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실시한 기업은 402개 대기업과 8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본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낮은 편이나 녹색채권 발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대기업의 주식은 환경정보 공시·평가 실적을 바탕으로 녹색금융 관련 인덱스 펀드에 다수 편입된 것으로 파악된다.¹²⁾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녹색금융 관련 지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621개 기업 중 463개 기업(74.6%)이 대기업이며 155개 기업(25.0%)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주식은 저조한 환경정보 공시·평가 실적으로 인해 녹색 인덱스펀드 투자 대상에서 상당수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¹³⁾

대·중소기업의 녹색지수¹⁾ 구성 현황

(개)

	대기업 ²⁾	중소기업 ²⁾	공공기관
지수구성 기관 수 ³⁾	463 (74.6%)	155 (25.0%)	3 (0.4%)

주: 1)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KRX ESG Leaders 150, KRX Eco Leaders 100, 코스피 200 ESG 지수, 코스피 200 기후변화지수, KRX 300 기후변화지수, KRX 기후변화 솔루션지수 등 총 7개의 녹색 금융 관련 지수 기준
 2) NICE 평가정보(KIS-Value)의 중소기업기본법 기반 기업규모 분류 기준
 3) () 내는 전체 지수구성 기관 수 대비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아울러 녹색대출이 기업들의 환경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요소를 별도로 관리할 역량이 취약하여 녹색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녹색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녹색대출의 금리 및 한도 우대 혜택을 비교적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및 향후 과제

투자자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녹색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자체 기후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해 녹색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녹색금융 활성화가 자칫 대기업으로의 자금 편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내 기업 수의 99.9%와 고용의 82.7%를 차지(19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친환경 생산구조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원활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G20 SFWG¹⁴⁾는 2021년 10월 한국을 포함한 20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G20 SFWG는 환경정보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

12) 녹색금융 관련 펀드는 액티브펀드와 인덱스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부족 등으로 본고에서는 인덱스 펀드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13) 한편,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체 중소기업(1,125개) 중 녹색지수에 편입된 기업(155개)은 13.8%이다. 상장기업 중 38.9%가 녹색지수에 편입된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의 지수편입 비중은 작은 편이다.
 14) G20 SFWG(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는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에 있어 제약요인과 해결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G20가 2021년에 새로이 설립한 워킹그룹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G20 SFWG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관리에 있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지침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및 금융당국은 G20 SFWG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대상의 환경정보 공시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녹색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¹⁵⁾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요소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 기업의 녹색금융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녹색금융 관련 자료의 공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동 자료는 시기적절하게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녹색대출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한다면, 정부 및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국내은행의 환경 관련 공시에 중소기업 대상 녹색대출 관련 항목이 없어 이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

15)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녹색금융 접근성이 제약된 중소기업에 녹색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